주제회의
-안전도시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안전도시 구현”

정현민
[한국, 대한안전연합 대표]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안전도시 구현〉

안전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다. 급속한 산업 발달과 문명의 다양한 발전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편리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과 함께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안전사고와 질병들이 개인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장사회에서는 성장과 결과를 위한 효율성을 목표로 추구하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함으로서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문제, 사회적 합의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인간이 마땅히 누려할 인권과 안전적 측면의 부정적 문제들을 해결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와 4만 건 이상의 화재발생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1994년), 성수대교 붕괴(19994년), 상품백과점 붕괴(1995년), KAL기 추락(1997년), 씨랜드 화재(1999년), 대구지하철 폭발(2003년), 태안반도 기름유출(2007년), 세월호 참사(2014년), 메르스바이러스(2015년), 코로나바이러스(2020)등 연이은 대형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충격과 각성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사회 정책적 조치는 도무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지 않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부재, 안전 불감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안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제적 노력은 미약한 형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안전도시'라고 의미한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accident)와 손상(injury)

예방 학술대회의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사업으로 권고하고 있는 모델이다. 최근에는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 특성에 맞는 사고와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확대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란 그 지역사회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2016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365번째 이자 국내에서는 11번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안전에 대한 다양한 평생학습과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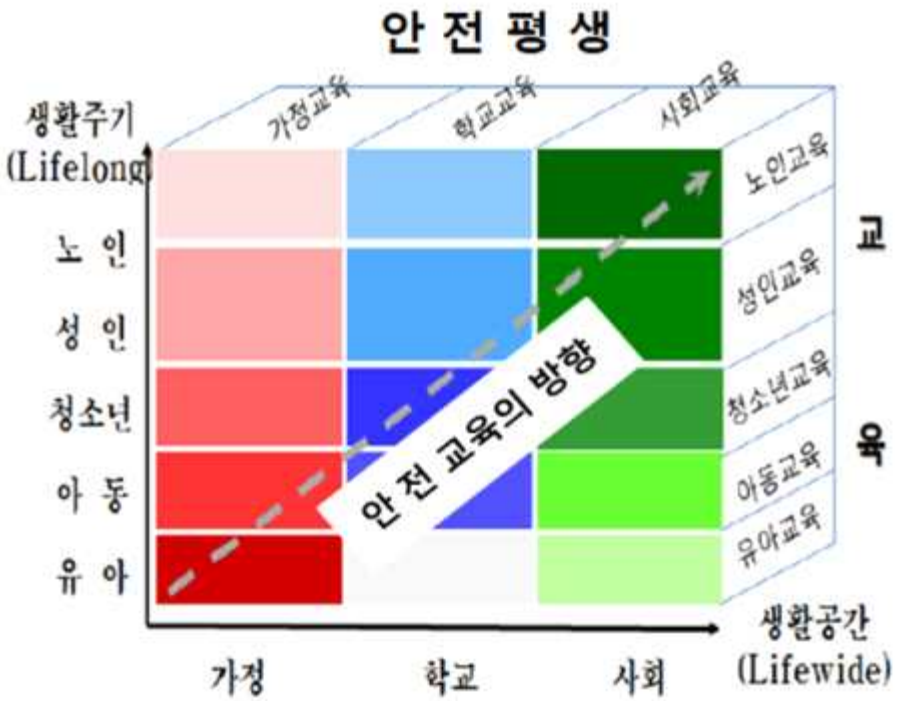
개인의 안전의식의 미흡은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망각주기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결국 국제안전도시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가정, 학교, 산업체 등 전 공간(Life wide)에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Life long)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안전의식과 안전실천행동이 습관화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형성시켜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 인가?' 에 대한 성찰 및 그에 따른 역할과 과제에 대해 재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학습적 패러다임에서 볼 때, 안전에 대한 학습은 생애 발달 단계별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모든 안전교육은 특정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공간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안전도시, 안전문화운동이 정부 및 산업체, 학교 주도 운영이라는 하나의 틀에 갇혀서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 가정, 사회 일상의 여러 공간들이, 그리고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안전도시가 완성될 수 있으며 제도적, 사회적 다양한 지원과 운동이 필요하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교육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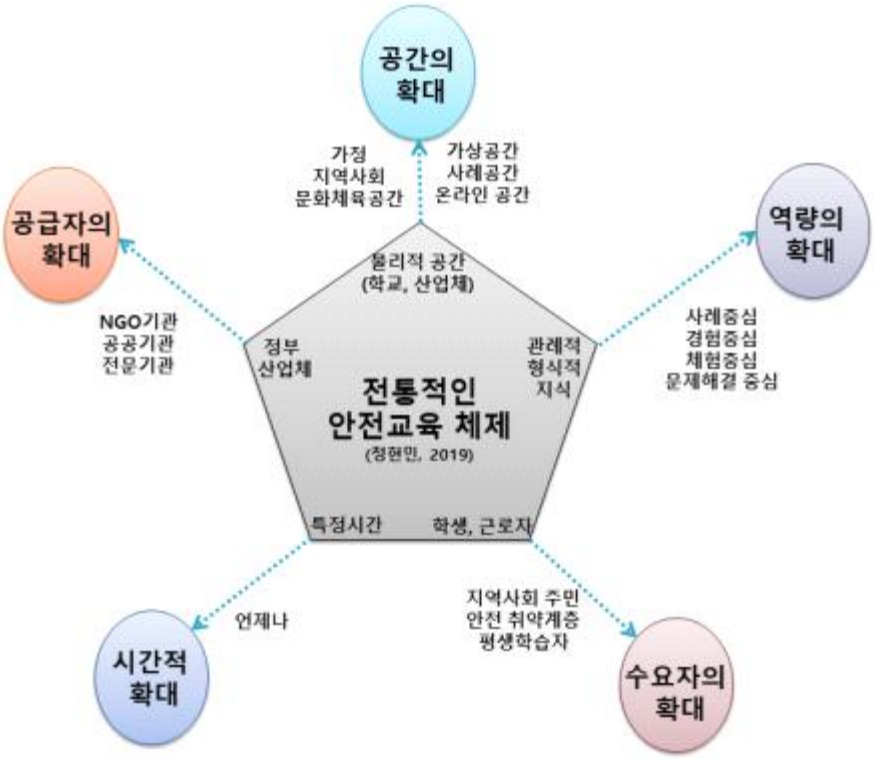
향과 체제가 '안전평생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와 산업체 중심이라는 국한된 안전교육 체계가 확장되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전체적 삶의 생활주기(Life long)와 가정, 학교, 사회 전체적 생활영역(Life wide)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학습체계의 안전평생학습 패러다임 접근과 방향으로 전 공간, 전 생애에 걸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 운동이 공유되고 재가공 되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아래 [그림-1]안전평생학습 참조).



[그림-1]안전평생학습 방향

둘째, 안전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접근을 통한 안전문화교육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안전교육 체제 운영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①학교와 산업체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있으며, ②이론 중심의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교육운영 방법의 한계, ③학생과 근로자 교육 위주에 따른 대상의 한계, ④ 교육프로그램 다양성과 접근성 부족에 의한 시간적 한계, ⑤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행·재정 운영에 따른 전문성 미흡과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속에서 학습하고 인식되어 행동화 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의 확대, 학습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역량의 확대, 학습대상자의 확대, 학습시간의 접근성의 확대, 학습공급자의 확대 할 수 있는 안전평생학습 패러다임 접근 방법 중심의 안전문화 정책

이 확산되어야 한다(아래 [그림-2] 안전평생학습 패러다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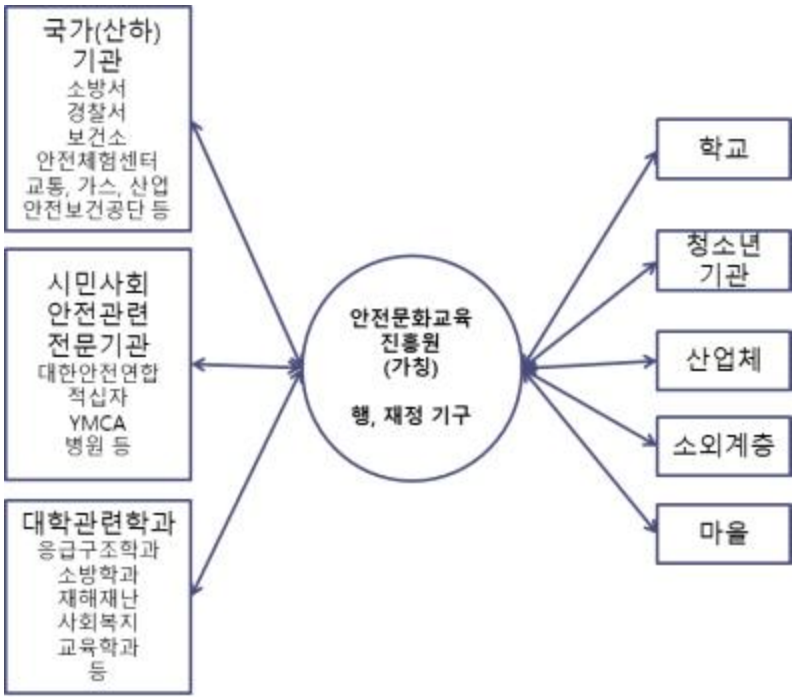
[그림-2]안전평생학습 패러다임

셋째, 주민의 삶 속에서 안전의식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적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안전체험관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안전체험관은 예산 투입대비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이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전문성과 관리·운영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아동·청소년 기관들의 일회성 방문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체험시설과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지 못해 그 시설의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형편을 감안 한다면, 대형안전체험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주민 편의시설인 공원, 놀이터, 공공스포츠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안전테마형 편의시설과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개편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학습이 특정공간이나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의 삶 속에서 자

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안전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안전문화 인프라를 발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기관 '(가칭)안전문화교육진흥원' 이 필요하다. 현재 안전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기관 등 산발적으로 각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 현장과 정책들의 종지를 모으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 핵심기구로서 역할을 통해보다 효과적인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문화교육진흥법 및 광주광역시 시민안전교육 기본조례 등 안전교육지원하고 안전교육지원센터 등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추진과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활성화를 견인할 (가칭)국민안전문화교육진흥원이 신설되어 각개 나누어지고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운동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안전문화교육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학 관련학과 등의 전문인력과 시설 갖춘 기관이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관련 된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과 기관, 각종 산업체, 다문화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시설 등이 있다. 그러나, 공급기관과 수요기관들 모두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인 현재의 체계들이 안전문화정책과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제공으로 안전문화교육을 활성화시킬 전문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아래 [그림-3]안전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그림-3]안전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안전도시다운 안전도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와 안전 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작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기관들이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도출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조력했을 때, 진정한 주민주도의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한 도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안전도시가 보다 활성화 되어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